

지구온난화, 에너지절약이 최상의 수단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겁다. 연일 언론에 관련기사들이 넘쳐나고 있고 일간지나 방송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의 분위기는 단순히 기후변화나 향후 미칠 환경변화에 대한 염려라기보다, 세계경제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킬만한 이슈거리라는 데 더 초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좋다.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야 했을 이슈가 이제서야 부각된다는 때는 아쉬움을 접어둔다면, 그것이 환경문제이거나, 아니면 기술이나 경제문제로 부각되거나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과 방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 지구온난화 문제가 경제와 관련된 규제와 수해문제로 귀결되는 편이 문제해결을 위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5월 31일, 드디어 부시 대통령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15개 주요 국가들의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하였다. 그동안 지구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태도를 감안하면 적극적 정책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시, 그의 전략이 무엇이든간에 말이다. 부시는 세계 15개국의 정상이 만나 2008년 말까지 18개월 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 목표에 합의하자고 역설했다. 만약 부시의

제안이 수용되어 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의 결과가 기존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목표치보다 후퇴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미국의 감축의무와 목표 또한 타 국가보다 훨씬 높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토의정서의 노력과 참여주체의 틀을 변경하는 새로운 구조는 최소한 그 보다 나아야 할 것이며, 미국의 온난화 기여도는 25퍼센트가 넘어서기 때문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수많은 해법들도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전환·절약·이산화탄소 포집·흡수원 확대 등 배출권 거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절약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국내시장이 활기를 띤 수준을 넘어서 보급과 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관련 산업이 급변하고 있음도 직감할 수 있다. 얼마전 신안의 20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는데, 만약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된다. 영덕의 풍력발전단지는 어떤가. 24기의 유영하는 날개가 영덕군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호 사무처장
(사)에너지나눔과 평화

최근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는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의 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에 따라 예전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등도 보급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개발 수준도 풍력의 경우 750kW가 국산화되었으며, 많은 국내기업들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잉곳과 셀 등의 생산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모두 다 정부의 보급정책이 일궈 놓은 결과이다.

이러한 보급의 확대를 두고 시장 과열현상으로 부정적 견해로 보는 부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 재생가능에너지 백지상태의 우리나라가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지구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화석연료의 야욕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길밖에 더 있는가. 지구는 더 이상 온난화의 한계로부터 자기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구의 생명이 얼마남지 않은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도 중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현재의 에너지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비용효과적 수단임엔 틀림이 없다. 많은 기업에서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거나 정부의 용자를 활용하게 되면 해당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유가임에도 이에 대한 기업의 투자실적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경기침체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겠지만 어쨌든 절약시설의 도입과 확대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에너지절약정책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점검시 예산의 규모와 수요조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만

약 에너지절약 시설을 도입하거나 관련 사업수가 많다면, 그에 합당한 용자규모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예산의 규모보다 수요가 적다면 적극 확대를 위한 추가 규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족같지만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은 역시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수단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분산형 전원으로써 에너지효율을 80~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는 열병합발전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시민 설득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과의 시장마찰도 줄일 수 있는 편익 또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설비의 효율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경우, 에너지효율 이외에 다른 항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지원시 에너지효율 시설을 옵션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절약시설 옵션화」전략은 기업의 절약시설도입 활성화에 틀림 없이 기여할 것이다. ESCO사업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자의 신뢰성도 담보해줄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대상지 발굴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ESCO사업은 사기업의 영업사업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에너지관리공단이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줘야 한다.

현재의 체계를 버리고 대안을 찾기보다 현재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편이 낫다.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에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이 다른 대안을 찾는 방안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